

“행정통합 찬성하지만…지역소멸·불균형 심화 우려”

전남도-도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

주요 현안사업 승계·의견수렴 절차 등 과제로

전남도의원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통합 과정에서 지역소멸과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요 현안 사업의 승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통합 추진의 핵심 과제로 제기됐다.

13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대통합 논의를 위한 전남도·도의회 간담

회에서 도의원들은 통합 이후 광주 출신 현상과 농어촌 소외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우려했다. 전경선 의원(민주당·목포5)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통합에는 찬성한다”면서 “경제적으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전남이 통합될 경우 광주로 모든 기능이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지탱할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규현 의원(민주당·담양2)도 “행정통합이 또 다른 지역 소멸을 낳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며 “농어촌 자원과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국립의대 신설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나광국 의원(민주당·무안2)은 “통합 이후에도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에 약속한 지원이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명확한 승계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참여하는 군공항 이전 6자 TF와 행정통합 논의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권 산업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중섭 의원(민주당·여수6)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에서 소외 지역이 발생한다면 통합의 명분이 사라진다”며 “석유·철강 산업이 동시에 위기에 놓인 동부권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이재태 의원(민주당·나주3)은 “선언부더하고 절차를 뒤따라가는 방식은 국민주권 시대에 적절한 집행 과정인지 의문”이

라며 “통합의 시너지를 키우려면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속도를 이유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도 “역사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본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한 달 만에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합의문에 명시돼 있고, 국립의대 신설과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통합 이후에도 그대로 승계될 것”이라며 “전남 지역 업체들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지만, 시간 제약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뒤에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 시·군을 돌며 공청회를 열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는 한편, 조만간 전남도와 추가 간담회를 열어 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원팀 체제’ 가동

도·시·조직위 총력 대응…전시·행사·안전·교통 분야 점검

전남도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시·조직위가 참여하는 ‘원팀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전시와 행사, 관람객 유치, 안전·교통까지 박람회 전 분야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여수시와 조직위원회, 연출 감독 등과 함께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회의는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여수시 부시장과 전남도 18개 실·국·원장, 조직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남도 지원 TF와 여수시, 조직위를 중심으로 박람회

준비 전반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주 행사장과 전시 공간 조성, 전시·연출·콘텐츠, 행사·공연·체험 프로그램, 홍보와 관람객 유치, 국제협력, 안전관리와 교통대책 등 핵심 과제를 놓고 실국 간 연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 행사장 기반시설과 전시공간 조성은 현재 공정을 40%대를 넘어섰다. 전남도는 2026년 7월까지 주요 시설을 완공하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시 콘텐츠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섬해양생태관, 섬미래관, 섬공동관 등 7개 전시관은 환경·기술·문화·산업을 아우르는 섬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담

아 2026년 4월까지 콘텐츠 제작을 마무리한다.

이후 5월부터 설치와 리하설에 들어가며, 섬 테마존과 아트포토존은 7월까지 조성을 완료해 관람객 체험과 SNS 확산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행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도 본격화된다. D-50 기념행사와 개·폐막식을 중심으로 세계섬문화공연, 섬공연예술제, 야간공연 등 주·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형 박람회로 완성도를 높인다.

관람객 유치 전략도 구체화됐다. 전남도는 관람객 3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국내 수학여행단과 기업·기관 연수 프로그램을 연계한 단체관람 유치에 나선다.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참가국 네트워크와 한국관광공사 해외자사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안전관리와 교통대책도 중점 과제로

다뤄졌다. 조직위와 유관기관, 운영대행사가 참여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491명을 체계적으로 교육·운영할 계획이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국제행사로, 전남을 해양관광과 섬 정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7월 광주·전남이 통합하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새롭게 하나가 된 광주·전남이 처음 맞는 때가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기반시설과 전시연출 등 기본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만큼, 7월까지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역대급 박람회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행정통합’ 시·도지사·교육감 오늘 첫 4자 회동

국회 후 서울에서 만날 듯…‘교육통합’ 충분한 공론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 선출직 대상인 광주시장·전남도지사와 광주·전남도교육감이 첫 4자 회동을 한다.

강기경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14일 오후 4시께 서울 모처에서 행정통합 관련 첫 4자 회동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시·도와 시·도 교육감이 긴밀히 조율 중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국회 박물관에서 열리는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신년교류회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가 끝난 후 행정통합 관련 첫 4자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자 회동에서는 시도 교육청 합의 내용과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사·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승진 등에 대한 우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안을 다듬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교육자치 부분 20개 조

항이 담겼으나 4자 회동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항과 문안 등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교육통합에 따른 현안을 해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법이 특별법 부칙과 조례에 담길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법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연후 16일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이자 통합 이후 운영 체계를 포괄적으로 담은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또는 16일 발표하는 지방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한 행정통합 지원 특례에 관한 내용은 법발의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1일 320만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의회는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회 대응 TF’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광주시의회, ‘행정통합 대응 TF’ 발족

특별법 검토·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회 대응 TF’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TF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위원회별 추천, 지역구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시의회 TF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 전반을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시·도 차원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의회 차원의 의견 정리와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특별법(안)의 입안 과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TF 위원들은 행정 통합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TF는 특별법(안) 검토, 통합의회 구성 방안 검토, 시민 의견 수렴 방안 마련, 향후 의회 대응 방향 정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수정 의장은 “행정통합은 광주·전남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응 TF를 중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국회 정개특위 가동…지선 선거구 확정 논의 본격 신임 감사위원회 최승필 교수 임명 제청

위원장에 송기환…여야 간에 윤건영·조정훈 의원

6·3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이날 위원장에 송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선 김한규·윤준병·이혜식·김문수·송재봉·이상식·임미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김승수·김은혜·박수영·배준영·서일준·강명구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개특위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확정 외에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선출 정수 확대, 지구당 부활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입법 지연이 공무원임권과 참정권 침해는 물론, 선거범죄 처벌 공백과 지방자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오 기자 solee235@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사진)가 신임 감사위원회에 제청됐다.

김초철 감사위원장은 최근 신임 감사위원회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으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이다.

광주 출신인 최 감사위원 제청자는 광주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07년 한국외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경제분석과 정책수립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어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 금융산업 도입, 금융기관의 부패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사원은 “소통 능력도 뛰어나 학교 및 학계 등에서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행정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성 등에 힘입어 감사결과와 신뢰성·효과성 등을 한층 더 높일 책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